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 안의 군사문화'

조 현 연

인류의 역사가 지배와 저항의 갈등과 대립, 충돌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그 과정은 망각과 기억, 청산과 계승을 둘러싼 끊임없는 다툼의 연속이기도 했다.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할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과거로서의 역사가 단지 잊혀지면 그뿐이라거나, 또는 이미 흘러간 기억 저편의 시간으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 인해 오늘을 사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청산 작업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발굴하고 폭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과거 및 그 부정적 유산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내는 과정, 즉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적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지나온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암울했던 만큼 오늘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거'의 목록은 무수히 많은 항목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 가운데서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체계화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면화되어 있는 반공주의와 군사문화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역사 현실을 심대하게 은폐, 과장, 왜곡해 온 반공주의와 사회의 병영화를 가져온 군사문화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질곡이라는 점에서 과거청산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반공주의의 역사적 기원, 반공주의에 '포획' 된 자유민주주의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국가폭력으로 상징되는 지배권력의 자기파괴적 광기로 얼룩진 야만의 세월을 경험해야 했으며, 또 국가에 의해 강요된 전도된 역사의 비극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의 질식과 교살, 역사의식의 빈곤과 역사적 무뇌아들의 양산, 강고한 기득권 보수질서의 구축 과정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신성불가침한 '국시' 國是로서의 반공주의가 똬리를 튼 채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반공주의의 출현과 득세는 '가능성의 공간' 이었던 해방정국이 분단국가의 수립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 간의 각축장이었던 해방정국은 좌파의 헤게모니 장악 및 일종의 이중권력의 시기인 미군정 초기 국면, 찬 · 반탁 과정에서 빚어진 기묘한 '이데올로기적 전치', 좌우갈등의 심화와 억압 - 저항의 연속적 충돌, '혁명적 민주주의' 의 진보적 대안국가가 냉전분단반공국가로 폭력적으로 대체되었던 '대역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격렬한 국내적 갈등의 동학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식적으로는 갖추되 반드시 반공국가여야 한다' 는 이른바 '미국의 한계선' American boundary 속에서 진행된, 국제적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국내화 과정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실체험의 기억과 학습 속에서 우리 사회는 공포의 항상적 동원에 따른 비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반공규율사회' 또는 '반공병영사회' 는 그것의 다른 표현이었다. 한국전쟁의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그것에 의해 냉전분단반공국가의 존재와 국가안보

의 이데올로기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하여 냉전반공주의가 민주주의 규범 및 다원주의 가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해방 및 개인의 내면적 자율성의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와 같은 다른 경쟁적 신념체계를 제압하고 굴절시켰다는 사실이다. 이제 반공은 죽음의 이미지와 공포의 동원을 통한 수동적 동의의 획득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헤게모니적 효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는 고갈되지 않는 정당성의 자원으로 반공이나 국가안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배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단순히 '주입'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 되고 '수용' 되는 것이며 물리적인 지배력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할 때, 반공은 단순히 허위의식이 아니었다. 즉 반공은 공산 '침략' 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가져온 고통과 궁핍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추방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시됨으로써 '적' 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는 공격적인 집단적 정서를 담는 이념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는 섬멸시켜야 할 적과 동일시된 채 '붉은 색 딱지 붙이기' 와 '빨갱이 마녀사냥' , 즉 일상적인 '희생양의 정치' 와 그 극단으로서의 '죽음의 정치' 가 출현하게 되었다. '반공이 아니면 모두 용공' 이라는 획일화된 도식이 통용된 이러한 세상에서 '나는 반공주의자' 라는 자기 존재 증명이 일종의 면죄부였다면, 반면에 '너는 빨갱이' 라는 시뻘건 화인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반역의 증표이자 악질적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추방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공주의에 포획된 자유민주주의' 는 그 필연적 귀결이었다. 자유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자유나 민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일사불란한 억압적 사회 질서와 자기검열의 이미지로 대체된 것이다. 물론 35년간 일제 식민통치에서 지배적인 정치규범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였으며, 그것은 국가 통치를 정당화하는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함께 형식적 독립을 획득한 제3세계의 '정상' 국가형태로서 권위

주의 독재정권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기파괴적이고 자기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민주주의 유린과 민주헌정질서 파괴의 역사, 즉 '독재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결합' 으로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시대사는 그것을 잘 증명해 준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 체제 수호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일체의 억압적 국가 통제를 합리화하는 상징조작용 논리였다. 자유주의의 빈곤과 민주주의의 결여, 광적인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의 과잉화, '혈맹인 미국' 에 대한 맹목적 추종주의의 득세, '냉전반공주의=자유민주주의' 라는 등식의 고정화, 민주 대 독재라는 자기제한적인 정치적 갈등구도의 고착화 등은 이러한 시대 상황의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와 감옥의 전성시대, 반공주의의 체계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동을 의미하는 1961년 5 · 16군사쿠데타와 박정희의 갑작스런 정치 무대 등장에서부터 1979년 10 · 26사건을 통한 '돌발적' 퇴장에 이르기까지, 박정희 독재통치 18년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대해 국립묘지에 있는 박정희 묘비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이 평가는 정녕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죽음과 학살의 이미지인 '적색 공포증' 에 기반한 반공주의가 체계화 · 제도화되고, 군사문화가 우리의 정신세계와 생활세계에 내재화된 논리로 안착되는 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독재를 경과하면서부터였기 때문이다. 이

승만 시기가 한국전쟁이라는 전시상황 속에서 반공규율사회가 형성된 시기라면, 박정희 시기는 반공규율사회의 군사주의적 논리가 가장 강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 박정희 시기의 반공주의는 이승만 시기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실체와는 무관하게 고정화된 관념으로 재생산되고 역으로 실체를 재규정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4 · 19혁명이 한국사회 민주변혁운동의 첫 출발점이었다면, 5 · 16쿠데타는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독재통치 제도화의 출발점이자, 종속적 천민자본주의와 착종된 폭력적 군사문화 시대, '감옥의 전성시대'를 연 계기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반공주의와 폭력적 군사문화의 지배는 계엄령과 위수령, 긴급조치 등의 남발을 가져왔다. 새마을운동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약진의 70년대, 대망의 80년대'가 헤게모니적 지배의 상징이었다면, 폭력통치의 선봉장인 '남산'과 긴급조치와 계엄령은 국가 억압성의 상징이었다. 박정희가 주창한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 희생론'일 따름이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5 · 16쿠데타의 이른바 '혁명' 공약 제1항의 표현처럼, '반공을 국시로' 한 박정희는 말 그대로 형식적이던 반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61년 반공법을 제정하고 4,000여 명에 달하는 저항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으로 그 첫 포문을 연다. 이후 '한강의 기적'과 '잘 살아 보세'의 합창 속에서도 저항세력의 정권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그 악명 높던 유신독재와 긴급조치 시대에 들어와 박정희의 감옥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위로부터의 전면적 역동원체제이자 민중운동에 대한 억압적 탈동원체제인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 '정치의 과잉'에 따른 혼란의 예방과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 및 시민권의 정상적 표출은 봉쇄되었고, 의회민주주의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안보와 법과 질서 유지를 구

실로 정보기관에 의한 대국민 사찰은 일상화되었고, 정치적 도전과 항거에 대한 불법 체포와 납치, 고문이 횡행하기도 했다. 특히 공안 조작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법 연행 → 장기 구금과 고문(과 타살) → 허위 자백 →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정찰제 판결' 이라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법 연행이나 고문의 금지, 묵비권 보장 등 신체의 자유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등은 한갓 쓰레기통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고도의 정치적 탄압과 전면적인 국가폭력으로 특징지어진 숨막힐 듯한 질식의 시대가 바로 박정희 통치의 구체적 실상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공산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적인 방위력이 필요하거니와 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또한 경제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자주적인 정신과 자조의 노력, 자율적인 행동과 자립경제의 기반 없이는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혼란과 파멸의 길만을 약속한 지난날의 경험"(1962. 1. 1. 신년사)이라는,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박정희식 반추의 결과이기도 했다.

전 사회의 병영화, 폭력적 군사문화의 사회화와 침묵사회의 출현

한편 이승만 시기가 한국전쟁을 통해 군대, 경찰과 같은 국가의 물리적 억압기구들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사회를 전시동원체제화하면서도 국가의 감시체제 및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였다면, 박정희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사회 영역에 걸쳐 확고한 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전 사회의 병영화를 촉진한 시기였다. 즉, 자주국방과 국민총화라는 이름 아래 박정희는 획일화된 명령체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군대식으로 재편하고, 폭력적 군사문화의 사회화를 강요했던 것이다.

박정희 통치시기에 이르러 국가에 의한 주민통제는 행정체제의 말단인 통 · 반에 이르게 되었으며, 국가재건국민운동, 주민등록제도,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도입과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주민통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중앙정보부, 보안사 같은 사찰기구, 경찰 등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뒷받침 속에서 반공규율사회의 극단적 형태인 '반공병영사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을 통해, 국론통일과 총화단결과 일사불란과 발본색원 등의 강제적 동원,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사상의 자유 억제를 위한 제도화를 시도하였다. 1961년 문교부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용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였고, 국민학교 도덕 교과서를 반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여 1962년 신학기부터 사용하였다. 1963년부터는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중학교에 『승공통일의 길』이라는 국정교과서를 보급하는 등 반공의식화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제 반공을 생활화하기 위한 반공교육의 제도화에 따라, 교육을 통한 반공주의의 2차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하면 네모꼴도 원이 된다'는 히틀러 치하 괴벨스식 선전술의 한국적 변용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반공의식화 교육을 통해 박정희는 '붉은 악마'에 대한 원시적 증오의 감정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면서 국민들을 말 잘 듣는 순한 양으로 길들이고자 했다. '무찌르자 공산당, 쳐부수자 괴뢰군, 때려잡자 김일성'이라는 표어는 사시사철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였다. 이처럼 분단 이후 특히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실시된 철저한 반공의식화 교육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었으며, 북한 하면 무찔러야 할 '악마의 무리'를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자동판매기식' 사고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국민 대다수가 제도권 교육을 통해 광적 반공주의에 중독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 카멜레온적 속성을 지닌 해바라기성 권력형 지식인들이 가세하여, 자칭 자유주의 신봉자임을 떠벌리면서도 독재자들에게 '우민화의 간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수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세 암흑시대에나 있을 법한 마녀사냥식 용공 음해가 되풀이되고 적색 공포증이 악마의 주술처럼 가공할 만한 괴력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그리고 제도권 교육을 통해 주입되고 감염된 사상 색맹증과 이에 따른 자기 검열의 정신적 내면화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리, 불신과 편견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분단 · 전쟁 · 반공 · 독재에 대한 학습과 체험적 기억에 의해 형성된 즉자적 피해의식, 이른바 '피난민 사회'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온몸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 그리고 집단적 증오의 영속화를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기억/망각의 폭력적 개입과 공포의 동원을 통해 정치적으로 길들여진 결과였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이 잘 나타내듯이,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구축과 그에 따른 '침묵사회' silent society의 출현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지배권력의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전도된 정치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과 방관과 체념의 사회적 심리가 망각의 사회화로 이어지면서 국가폭력에 따른 숱한 '역사적 희생' historical sacrifices이 반복적으로 양산되는 데 한몫을 톡톡히 거들어 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침묵사회'화는 '폭력사회' violent society화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 사회의 병영화와 군사문화의 확산에 비례하여 박정희 체제하에서 성장 · 발전주의는 극단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반공주의와 하나로 융합되었다. 군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그것도 최단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일방적인 내리꽂기식의 획일화된 명령체계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일탈'적 행위는 '전체를 위해' 일체 불허되었으며, 개발과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이적행위이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다. 그 결과 반공주의와 군사문화의 회로판, 또는 그 복합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폐쇄적인 부국강병적 국수주의, 황

금만능주의 등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

21세기 오늘, 반공규율사회의 변형적 해체와 재편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질곡으로서 그 위용을 맘껏 뽐내 왔던 반공주의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1987년 민주화와 냉전 해체라는 세계사적 전환 속에서, 그리고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21세기 오늘 반공규율사회는 변형적 해체 또는 재편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변형적 해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와 같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공주의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서해교전에 대한 '국론 분열' 과 상대적으로 평온한 사회 분위기의 유지, 금강산 관광의 단절 없는 진행은 적대적 반공주의의 동원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일사불란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몇 가지 복합적인 사태 전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북한의 '체제 열등성' 이 인지됨으로써 반공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공급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수용자인 대중들의 차원에서 재구성됨으로써 빚어진 효과였다. 즉 위협적 대상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일종의 경멸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과거의 소극적 · 수세적 반공주의가 체제우월적 · 공세적 반공주의로 재구성적 전환을 한 것이다. 그것은 반공주의의 뒷받침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자본이 더 이상 적대적이고 섬멸적인 반공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상황 변화에 따른 역설적 효과이기도 했다. 나아가 오랫동안 주입되어온 낡은 반공주의의 관념적 허상과, 북한바로알기운동과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알게 된 실재 간의 불일치, 즉 '머리에 뿔이 달린 붉은 색 악마들의 천국' 으로 알려진 북한에 우리와 같은 '사람' 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들이 적이기에 앞서 우리의 동포라는 것이 가져온 효과이기도 했다. 이전의 대결형 남북관계를 평화공존형

관계로 전환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6 · 15 남북공동선언이었다. 아울러 2002년의 8 · 15 민족통일대회와 아시안게임의 북한응원단 참가는 북한 열풍을 불러올 정도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형적 해체의 징후는 반공주의와 동전의 양면인 맹목적 친미주의의 균열 현상에서도 읽을 수 있다. 즉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 사건 속에서 제기된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 부시의 공개 사과, 살인 미군의 한국법정에서의 처벌 등을 외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의 함성과 촛불시위, 그리고 반전 평화시위의 조용한 외침은 반공이나 맹목적 친미가 아니라 평화와 자주가 오늘의 시대정신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자 반공규율사회의 한 축에 조금씩 파열구가 생기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과 북한, 남북관계에 대해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합리적' 주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자, '전쟁은 곧 공멸이며, 평화만이 살 길' 이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수구세력의 헤게모니가 약화된 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득권 보수세력의 위기감과 친미반공집회

그러나 반공규율사회의 변형적 해체 속에서도, 반공주의는 '우리 안의 반공주의' 라는 일상적 내면화를 통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죽은 박정희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아직도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호대결적 · 긴장적 남북관계를 전제로 하는 적대적 반공주의를 내면화한 우리 안의 반공주의는, 특히 아직껏 자기폐쇄적인 낡은 회로판 속에 갇혀 있는 보수정치권과 기득권 보수세력들에게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보수 독점의 낡은 정치판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특히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색깔논쟁과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한 소모적 공

방전은 그것을 잘 드러내 준다. 안정된 사회일수록 선거의 극적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 선거는 '북풍'이라는 막판 변수에 시달려 왔다. 1963년 대선에서의 사상논쟁과 "김대중이 피리를 불면 김일성이 춤을 추고, 김일성이 북을 두드리면 김대중이 곡조를 맞춘다"는 71년 대선에서의 박정희의 공격 이래, 87년 대선에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92년 대선에서의 이른바 '김일성 지령설', 97년 대선에서의 오익제 편지 사건과 '황풍'(황장엽 바람)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북한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며 한나라당이 제기한 색깔론이나 "급진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때 경제파탄과 사회혼란 안보위험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인제의 지원사격, 대표적인 극우논객인 조갑제의 색깔 선동, 북한 선적 (기획)나포사건 등 '미국발 북풍', 장인의 '좌익' 전력 시비 등 일련의 사태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덧붙여 재벌체제 개혁과 분배적 정의, 언론사 세무조사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개혁' 추진에 대해서조차도 좌파적 · 친북적이라느니, 사회주의적 · 체제전복적이라느니 하는 현실왜곡적 ·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퍼부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아 옛날이여'를 외치면서 악취 나는 악마의 주술을 끄집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낡은 정치인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반공주의 및 반공규율사회의 변형적 해체와 재편은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했다. 독재자 박정희를 숭배하고 반공주의의 전도사 조갑제를 신봉하는 이른바 '청년 우익'들이 조직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정점은 친미반공집회로 나타났다. 개신교 대형 교회 목사들과 재향군인회 등 극우단체가 앞장선 가운데 열린 지난 1월 두 차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기도회', 3월 1일 여의도의 '구국 금식 기도회', 6월 21일의 '6 · 25 국민대회' 등 잇따른 친미반공집회에서 변화에

대한 이들의 위기감과 적대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 6월 21일 태극기와 성조기로 물결친 시청 앞 광장에서는, "우리는 미국을 사랑한다", "전교조와 같은 좌익단체를 진멸해야 한다", "사탄의 정권인 김정일은 붕괴되어야 한다"는 기도 소리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노래와 함께 메아리쳤다. "이 땅의 공산당과 간첩들의 모가지를 다 잘라주소서"라는 섬뜩한 기도문의 낭독이 상징하듯이, 여기에 생명과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을 리 없었고, 오로지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호전적인 냉전적 안보논리와 친미지상주의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들의 집회나 설교가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차원의 종교적 행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냉전 · 분단 · 반공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들의 불편한 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아가 그동안 누려온 특권 상실에 대한 기득권 보수세력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녕 정상적인 보수우익이라면, 외국군의 주둔을 국가주권의 침해로 느끼고 그들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비판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 아닐까 싶다.

'우리 안의 반공주의'와 자기검열로서의 주민등록제도

물론 이러한 일들을 단지 '그들'만의 우스꽝스런 시대착오적인 짓이라고 쉽게 치부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기득권 보수세력들처럼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의 통제'에 익숙해져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역시도 위로부터 강요된 '우리 안의 반공주의'를 체화한 채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을 너무 쉽게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 국가발전 가로막는 용공책동 분쇄하자 / 간첩은 표시 없다 너도나도 살펴보자 / 한순간의 좌경사상 후손에게 눈물 된다 / 설마 하는 방심 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 / 사회혼란 조장하

는 불온문서 신고하자 / 혼란 속에 간첩 오고 북한오판 초래한다 / 너와 나의 방심 속에 무너지는 국가안보 / 흔들리는 안보정신 경제불안 사회불안"

위의 인용구는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에 올라온 '반공 표어 베스트 10' 으로, 이것을 단지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만 유행한 철 지난 옛 노래로 치부할 수는 없다. 민주화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듣고 보고 신고하자' 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포스터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한쪽 공간을 어김없이 장식하고 있으며,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라는 지하철 방송도 아주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약 5~7km마다 반공표어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 있는 반공표어판만 해도 수십만 개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판기의 컵, 각종 입장권, 목욕탕과 공중 화장실 등 생활 현장 곳곳에서도 다양한 구호와 그림으로 치장한 반공과 안보의 엄숙한 정신교육은 실시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등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 의 모습이나 '흰 고양이 속에 숨어 있는 검은 쥐' 의 이미지, 또 최근의 '마음은 열어도 신고정신은 철저히' 라는 표어는 그 다양성과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민주화 경로라는 것이 사실 위로부터 진행된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민주화라는 것을,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린 민주주의'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간첩' 에 대한 경계나 신고를 넘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실질적 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의식을 내면화하고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단적 자기 최면 효과 속에서 그것에 익숙해진 보통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동화된 채, '적과 동지' 라는 절대적 이분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나아가 그것은 권력과 체제의 모순, 사회 기득권 집단의 잘못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불순 책동, 사회혼란행위, 북한의 도발 위험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빚어낸다. 그리하여 자동적으로 새로운 변

화에 대한 대항 정서, 즉 앞서 본 청년 우익들의 결집과 친미반공집회처럼 위기감과 적개심의 극대화 속에서 법과 질서, 안보, 총화 단결을 절대화하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한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주민등록증은 내면화된 자기 검열을 우리 스스로 얼마만큼 체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때가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제 발로 동사무소를 찾아가 지문까지 찍어 주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직 냉전과 분단과 반공을 호흡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만 익숙한 풍경이다.

일제 식민통치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형 주민등록제도'는, 냉전 시대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이름 아래 통제와 감시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다가 박정희 독재 통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반공병영사회와 국가동원체제로 돌진하는 상징적 조치로 다시 부활하였던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예 의무화한 1970년 제2차 개정 당시, 그 개정의 사유는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였다.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선 1980년 5차 개정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불심검문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민등록증을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듯 주머니 속에 잘 보관한 채 살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국가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으로 자신의 존재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첩이나 불순분자, 범법자로 혐의를 받게 되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된 셈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감시와 통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는 국가통제로의 자발적인 편입 과정이자, 반공규율의 내면화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 시대라는 오늘, 과연 이 문제의 주민등록제도를 내면화된 반공규율의 통제와 감시와 검열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판단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국가 통제와 자기 검열에 길들여져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 내재화된 '우리 안의 군사문화'

한편 한국전쟁의 경험과 남북 간 군사적 대치의 항상화는 우리 사회를 일종의 '전쟁사회'로 만들었으며,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는 군사문화를 강제 이식하고 사회의 병영화를 통해 그것을 '우리 안의 군사문화'로 일상화해 내는 정치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5·16이후 군사정권이 수립되면서 군사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군사문화의 황금시대를 구가해 왔다. 양적인 성장만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추구하는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하에서, 또 군 출신 독재자들의 자의적인 폭력통치 아래서 군은 물론 사회조차도 병영화되었고, 절대 복종의 하향식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오늘날 비록 군사독재정권은 퇴장했지만 여전히 군사문화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의 군사문화'로 내재화되어 일상 생활 속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군대 복무가 주요 통과의례로 정착된 한국사회 전반에서, "너,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군사문화의 헤게모니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것이다. 또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군대 하면 한 시간 정도 나눌 얘깃거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화의 소재들 중 하나다. 군에 다녀온 남성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지금이 말세지, 그때가 좋았어"라는 식의 말을 쉽게 내뱉는다. '죽을 고생'을 한 인간성 파괴의 생생한 현장이자 거대한 반민주적·비교육적 훈육장으로서의 병영이 부지불식간에 신

성한 장소로 돌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그토록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군사문화의 특징은 절대적 상명하복의 계급성, 성과 위주의 물신성, 폭력성, 획일성과 집단성 등으로 집약된다. 우선 우리가 군대에서 배워오는 것 가운데는 기강 확립이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조직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한 순응과, 적과 나의 이분법에 대한 체험적 습득이 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에서 비합리와 임기응변식 요령을 배우게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무리없이 적응하게 된다. 즉 무조건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가장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의 경험은 군을 제대한 뒤 일상의 생활세계로 연장되는 것이다. 고참과 졸병을 위계적으로 구분짓고 차별하고 약자에 대해 멸시하는 일상적인 생활세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항상 파악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그들의 일상 생활이 군 생활의 연장임을 어느 정도 엿보게 해 준다.

한편 일상화된 적과 나의 이분법은 외부의 적을 막는다는 구실하에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찾아내게 하고, 목숨을 건 적과의 경쟁 속에서 나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문자 그대로 사생결단식 승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단순논리의 지배 속에서 전쟁에는 다만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각종 편법이 활개치는 가운데, 사람들은 쉽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논리의 포로가 되고 만다. 이것이 외형적인 성과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흐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결과만이 중시된 채 과정은 무시되고 제 시간 안에 하나의 성과를 이루는 것, 속 빈 강정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외적 성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참사라는 박정희식 군사적 성장제일주의의 파멸적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군대=폭력의 왕국' 이라는 등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군사문화의 또 다른 부정적 효과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 폭력의 상습화,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현장에서부터 작업장,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폭력은 여전히 쉽게 볼 수 있는 군사문화적 행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획일성과 집단성도 군사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온통 줄이 맞춰진 내무반에 비치된 물품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각이 진 채 개어져 있는 모포가 획일성의 상징이라면, 병영생활의 집단성은 사소한 개인의 실수도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벌을 가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획일성과 집단성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 자유로운 개성은 수용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일상은 군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사회의 시스템이 군대의 시스템과 동일하다는 것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배어 있는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군사문화가 극우 성향을 지닌 기득권 보수세력의 유력한 생존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군사문화는 그 비인간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의 질을 심대하게 잠식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청산의 첫 단추는 기성 정치의 혁신적 재편에서

과거청산이란 한마디로 과거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해악과 유산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현대사는 과거 역사를 정직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과거청산의 한계적 역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끊임없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또 정의의 실종, 도덕적 가치의 상실, 사회적 연대에 바탕한 공동체 정신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공주의와 군사문화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내재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진취성, 그에 바탕한 역사의 진보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것은 사회적 비판정신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적 풍

토와 정신 세계를 척박한 황무지로 만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와 진실로부터의 도피와 허구에의 안주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안의 반공주의'의 역사적 뿌리인, '적대적 상호의존'의 관계를 기본 특징으로 하는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반공주의와 동전의 양면인 미국 추종주의로부터의 탈피와, 한미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미국이라는 단극 중심의 세계적 패권체제를 존속시키려는 '깡패국가'에게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반공주의를 양산해 온 국가폭력 네트워크, 즉 국가보안법체계 및 억압적 국가기구의 혁신적 재편과 보수의 정상화, 그리고 생활세계의 일상적 민주화를 통한 '우리 안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은 의식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안보 속 평화'를 '평화 속 안보'로 대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의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보다 정치에서, 즉 정치의 정상화와 선진화에서 찾아질 필요가 있다. 이미 증명되었듯이 낡은 회로판에 익숙해져 있는 기성의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편하지 않고서는, 반공주의와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린 해악을 씻어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기성 보수 정치가 반성적 자기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첫 출발은 집합적 실천을 통해 보수 독점의 정치적 결빙구조를 진보 대 보수의 정상적인 경쟁정치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조현연 hycho@mail.skhu.ac.kr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소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등 역임. 저서로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과 논문으로 「진보정당의 수권 전략과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의 길」 등 다수가 있다.